

"AI 시대, 청년 고용 없는 성장 우려"...고용센터도 첫 실험[노동장관 인터뷰②]

등록 2026.06.21 07:00:00 | 수정 2026.06.21 12:04:24



[서울=뉴스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스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6.17. 20hwan@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고흥주 김경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고용 문제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신입을 뽑아 훈련시키기보다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반기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첫 실험에 나선다.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각종 수당 지급 등 행정업무 중심이던 고용센터를 전직·이직·경력관리와 청년고용 지원 거점으로 바꾸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7월부터 시작한다"며 "고용서비스, 고용 분야에서 AX 전환을 빠르게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일터 진입조차 못해"...하반기 K-뉴딜 아카데미로 교육 강화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p) 급락했다.

김 장관도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현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일터에 진입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권리를 가지려면 일터 안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가장 뼈 아픈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등 노동 현안에 주력한 반면, 고용정책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을 분리해서 보는 것도 낡은 문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들이 일터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단순한 취업지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터에 들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이 볼 때 좋은 일자리는 체불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고,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일자리"라며 "이것이 청년들의 상식에 맞는 일자리라면 기초노동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 확산이 청년 입직난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해 훈련시키기보다 곧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고용 없는 성장인데, AI 시대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이직과 전직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K-뉴딜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필요

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기업 등이 직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분야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고 미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그룹과 하이브, AI·제조 분야에서는 SK와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자동차, 금융 분야에서는 KB국민은행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장관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7월부터 시작한 다"며 "기업 참여도 많고 청년들의 참가 수요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상 채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아카데미 과정에서 이른바 '에이스'를 당연히 데려가고 싶어 할 것"이라며 "완전히 채용과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2600억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더 늘려야 할 판"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외국인 등 가용 인력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청년 창업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청구서 커리어 거점으로...국취제 AI 파일럿 도입



[서울=뉴스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스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6.17. 20hwan@newsis.com

김 장관은 청년 입직난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체계 전반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봤다. AI 시대에는 한 직장엔 오래 머무르는 방식이 약해지고 이직과 전직이 자연스러워지는 만큼, 고용센터도 실업급여 지급 창구를 넘어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에 연간 200만명 정도가 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직원들은 대부분 실업급여, 육아지원제도 수당, 통상임금 계산 등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고용센터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정보도 얻고 커리어 관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AI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AI 비서 등 고용노동행정 AI 전환(AX)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확 줄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AI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4·5월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AI를 적용해보기로 했다.

참여자가 15개 안팎의 자기 응답 문항에 답하면, 여기에 고용보험 상실·취득 이력, 고용24 입사 지원 기록, 직

업훈련·자격정보 등 약 20종의 개인별 행정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AI·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년 참여자가 많고, 지원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참여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AI 고용센터 시범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구직활동 추천, 활동 신청, 수수료 확인, 수당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고용센터가 진짜 AI 시대에 걸맞은 고용센터로 바뀌어야 한다"며 "AX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 상담원들도 상담원 직렬이 아니라 고용서비스 직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권역별 특화 고용센터 구상도 밝혔다. 서울은 청년, 부산은 해양, 충청은 반도체, 울산은 철강·조선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서울이면 청년 특화, 부산이면 해양 특화, 충청권이면 반도체, 울산 쪽이면 철강·조선 이런 식으로 고용센터도 특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이 대표적인 '후행지표'인 만큼, AI를 활용해 산업·지역별 고용위기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AI와 인공지능을 연결해 주차장의 불빛이나 물류 움직임 같은 것도 분석하면서 일자리 양이 어떤지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고용서비스, 고용 분야에서 AX 전환을 빠르게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AI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한국 노동시장의 비숙련 문제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AI가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제조업 현장의 숙련을 AI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 등을 예로 들며 "숙련 노동자들이 퇴직하게 되면 그 뒤가 없다"며 "대가 끊길 찰나에 AI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부결엔 "아쉽지만 존중...최저보수제 논의 계속"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제공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삼자주의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구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임위 논의가 부결됐다고 해서 플랫폼·노무제공자 보호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노동부는 노동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최임위 결정에 기대 핑계 삼아 우리가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최저보수제' 논의는 최임위 부결과 무관하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같은 제도를 상상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와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kimk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